

Welfare  
Issue  
Today

2013  
4. 1  
vol. 1

# 복지이슈 Today

- 창간사** 3 복지이슈 Today 창간에 부처
- 국내동향** 4 [소득보장] 박근혜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정책과 서울형 기초보장제  
5 [장애인] 박근혜 정부의 장애인정책과 장애인 희망서울 종합계획  
6 [어르신] 박근혜 정부의 어르신일자리 정책과 서울시 고령자 취업지원 사업  
7 [사회서비스] 박근혜 정부의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정책과 서울시 시범사업  
8 [주거] 박근혜 정부의 장애인주거복지정책과 서울시 노인·장애인용 지원주택 프로그램
- 이슈와 통계** 9 서울시는 어르신들이 살아가시기에 얼마나 좋은 도시일까?
- 해외동향** 10 [미국] 근로장려세와 저축 장려 프로그램 연계를 통한 저소득 가구 자립 지원  
11 [미국] 은퇴자들의 경험과 능력을 활용한 지역사회참여, 시니어코(Senior Corps)  
12 [영국] 중앙정부의 보조금 삭감으로 인한 최저소득층의 지방세 인상  
13 [영국] 주택조합(Housing Association)의 아동빈곤 완화 노력  
14 [독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법정 최저임금제도  
15 [독일] 장애아동의 위탁가정 양육법 개정 시도  
16 [일본] 생활보호비 3년 간 7.3% 인하로 최대 월2만엔 감소  
17 [일본] 도쿄지방경찰청, 고령자·장애인재범방지 위해 복지전문가 채용  
18 [그리스] MdM Greece의 복지서비스와 결합된 의료지원 프로그램

#### 편집위원회

송성숙(서울시복지재단 전략기획본부장, 편집위원장)  
김승연(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사)  
김지영(서울시복지재단 경영지원부 교류협력팀장)  
김혜정(서울시복지재단 연구개발부장)  
안철홍(서울시복지재단 경영지원부 교류협력팀 차장)  
정혜주(고려대학교 보건정책학과 교수)

#### 집필진

김미현(서울시복지재단 연구개발부 정책연구팀장)  
김지영(서울시복지재단 경영지원부 교류협력팀장)  
김혜정(서울시복지재단 연구개발부장)  
서종녀(서울시복지재단 연구개발부 정책연구팀 연구위원)  
이상철(서울시복지재단 연구개발부 노인정책팀 연구위원)  
이서윤(서울시복지재단 연구개발부 정책연구팀 연구원)  
이순성(서울시복지재단 연구개발부 노인정책팀장)  
정선경(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개도국사업본부)  
정은하(서울시복지재단 연구개발부 노인정책팀 연구위원)

## 복지이슈 Today 창간에 부쳐

올 2013년은 서울시복지재단이 창립 1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광역자치단체 최초의 복지재단으로 출범한 재단은, 서울시와 복지현장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며 복지분야 민관 거버넌스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여 여러 타시도에도 복지재단이 설립되는 계기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제 재단의 재도약을 준비하며, 복지정책의 개발과 새로운 복지서비스의 발굴 및 정착이라는 기능을 보다 시민중심적으로 재편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에 창간호를 내는 복지이슈 Today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그동안 재단에서는 연구부서를 중심으로 여러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성과물들을 만들어 왔고, 이를 토대로 서울시의 여러 정책들이 입안되어 시행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급변하는 복지환경 속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정책의 입안과 실행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정보와 제언들이 보다 신속하고 독자친화적인 형태로 제시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나날이 커지고 있다. 복지이슈 Today는 매월 발행을 통해 정보의 신속한 제공이라는 요구에 부응하고, 국내외 동향관련 모든 기사들을 1페이지 내외의 간결한 형태로 제시함으로써 '읽기 편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시중에 출간되는 다양한 복지관련 정보지와 복지이슈 Today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정부의 시각에 입각하여 이슈를 선정하고 내용을 구성한다는 점이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는 다른 고유한 역할과 특수한 복지수요가 있다. 복지이슈 Today에서는,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와 해외 주요도시의 복지현안 및 정책사례 등을 소개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상황에 적합한 정책 및 서비스 개발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번호 「국내동향」에서는 지난달 말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주요 복지정책과 이와 관련된 서울시의 복지정책을 5개 주요 분야로 나누어 비교분석하였다. 복지확대의 기치 아래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정책은 지자체의 복지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번 기사들을 통해 중앙정부의 정책과의 연계성 속에서 서울시의 복지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 「이슈와 통계」에서는 지난해 재단에서 실시한 「서울시 노인 실태 및 욕구조사」를 통해 밝혀진 서울시의 고령친화도 수준을 살펴보았다. 분야별 격차와 연령대 및 경제계층별 격차를 일목요연하게 제시한 그래프를 통해, 고령친화 정책의 지향점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기를 바란다.

이번호 「해외동향」에서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그리고 그리스의 사례가 소개되었다. 이 중 영국의 최저소득층의 지방세 인상과 일본의 생활보호비 감소에 대한 기사는 글로벌 경제위기의 격랑 속에서 각국의 복지정책이 얼마나 요동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도 「해외동향」에서는 세계주요도시와 관련된 복지현안과, 시민들의 복지제감도를 높일 수 있는 벤치마킹 사례를 꾸준히 소개하고자 한다.

첫걸음을 내딛은 복지이슈 Today에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박근혜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정책과 서울형 기초보장제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영역별 맞춤형 급여체계 구축’이, 지난 2월 21일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제안한 140대 국정과제의 고용·복지 분야 첫 번째 과제로 발표되었다. 이 과제는 차상위 계층의 기준을 중위소득 50% 이하로 상향하고, 개인별 상황에 맞추어 생계, 주거, 교육, 의료급여별로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을 차별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빈곤정책 전문가들 사이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온 상대적 빈곤수준에 의한 정책적 빈곤선의 설정과 개별 급여체계의 도입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가계부 조사를 토대로 예측된 최저생계비와 통합 급여체제를 근간으로 한 현행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하고 있다.

이미 박근혜 정부는 대선공약집을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와 재산의 소득환산제 개선 등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방안과, OECD 상대 빈곤기준인 중위소득 50%로 차상위계층을 확대하고 생활영역별 맞춤형 급여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초생활보장 급여대상자의 폭을 넓히는 등의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을 복지 사각 지대 해소를 위한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정책은, 올해 하반기 실시를 목표로 준비작업이 진행 중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실행계획 수립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시에서 작년 10월에 발표한 「서울시민복지기준」의 핵심사업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이하임에도 불구하고 법정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선정하여 기초수급자 1/2수준의 생계급여와 교육 및 해산·장애급여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19만 명을 지원할 계획이며, 시행 첫해인 올해에는 4만 명을 지원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수립 중이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비수급 빈곤층을 일차적인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등이 개정될 경우, 대상자 선정기준 등에서의 일부 조정이 필요하게 된다. 이 밖에도 ‘서울시민 복지기준 설정 연구’ 진행 당시부터 쟁점이 되어온 기초생활보장 영역에서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 등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될 수 있다.

글 \_ 김지영

## 박근혜 정부의 장애인정책과 장애인 희망서울 종합계획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제시한 장애인 분야 국정과제인 ‘장애인의 권익보호 및 편익증진’은 크게 두 축으로 구성된다. 사회전반적인 체제구축을 통한 ‘권익 보호’와 일상생활지원을 통한 ‘편익증진’이 그것이다. 장애인권리보장법 및 발달장애인법의 제정, 이동권 증진을 위한 교통수단의 확충, 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택설계 확대, 교육권 보장을 위한 특수학교 증설 등이 장애인 권익보호를 위한 주요 정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한편 편익증진을 위한 일상생활지원정책으로는 중증장애인 활동지원과 장애인연금의 대상 및 급여 확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보급 등이 제시되었다.

박근혜 정부의 위와 같은 계획은 지난해 서울시에서 발표한 ‘장애인 희망서울 종합계획’과 그 방향성에 있어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장애인 권리보장 차원에서는 유사한 분야에서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고 있어 중앙정부와 정책적으로 어긋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그러나 접근방식의 차이는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앙정부는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의무고용비율 제시 등 거시적이고 간접적인 정책을 추진한다. 이에 반해 서울시에서는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기본으로 직접적인 일자리 확대, 장애인 생산품의 판로지원 및 우선구매를 위

한 조례 개정 등을 통한 다차원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소비(판로지원 및 우선구매)·생산(기업의 물품 생산)·고용(장애인 고용)이라는 경제활동 선순환 고리를 활성화시킨다는 점에서 중앙정부의 단선적 접근에 비해 긍정적 효과를 기대해 볼만하다.

반면 일상생활지원 차원에서는 서울시의 계획이 보다 선제적 성격을 지닌다. 이에 중앙정부와의 정책적 조응관계 형성을 위한 면밀한 접근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에 대하여 박근혜정부는 활동지원의 ‘대상 및 급여량’을 모두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일 제도에 대한 서울시의 계획은 국비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서비스 이외에 시비를 투입하여 서비스를 확대시키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확대정책 시행에 앞선 서울시의 지방재정 지원을 통한 서비스 확대는 이용상·행정상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인 정책시행을 위해서는 대상 및 급여량의 중복 및 누락 등을 고려한 정확한 정책설계가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에서는 근로 장애인을 위한 자산형성 프로그램을 기존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중앙정책의 사각지대인 중간 저소득계층 근로 장애인의 빈곤층 전략을 예방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접근이라 보인다.

글 \_ 이서윤

### ▶ 참고자료

-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집(2012.12), 「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 있는 변화」
-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2013.2),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제안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 한국경제(2013.2.25), [박근혜 정부 출범] 기초생활보장 혜택 151만 가구 늘어난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3022405101&intype=1>
- 서울시 보도자료(2012.10.23), “서울시, ‘서울형 기초보장제’로 비수급 19만명 생계지원” <http://welfare.seoul.go.kr/archives/8419>
- 서울특별시·서울연구원(2012.9), 「서울시민 복지기준 설정 연구」.
- 서울시민복지기준추진위원회(2012. 10), 「서울시민복지기준」

### ▶ 참고자료

-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집(2012.12), 「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 있는 변화」
-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2013.2),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제안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2), 「2012년 장애인정책포럼」
- 서울특별시(2012), 「서울시 장애인 희망서울 종합계획」

## 박근혜 정부의 어르신일자리 정책과 서울시 고령자 취업지원 사업

박근혜 정부의 노인정책에 대한 대부분의 관심이 기초연금 도입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하지만, 노인일자리 대책 확대 또한 노후지원 분야의 주요 대선공약으로 제시되어 있다. 여기에는 연간 5만개 이상의 어르신일자리를 신규 창출하여 임기 내에 2만개의 어르신일자리를 확충하고, 월20만원선인 보수를 두 배 수준으로 인상하며, 참여가능기간도 현행 7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공약은 발표될 당시부터 일자리 창출이나 재원마련 방안 등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지며, 기존의 공공일자리를 답습함으로써 '한시적인 저임금일자리'라는 한계를 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이미 노년기에 들어선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사업에 대해서만 언급함으로써, 노년기 진입을 앞둔 세대 특히 최근 주요 인구집단으로 부상한 신노년층(베이비부머)을 위한 일자리 대책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비판도 받았다.

이러한 비판에 대한 반응인 듯 지난 2월에 발표된 인수위 국정과제보고서에서는 '생애설계 교육강화'라는 항목으로 중년층 이상의 생애설계 교육에 대한 내용

이 포함되었으나, 여기에서도 생애설계 교육과 노인일자리를 연결시킬 방안은 제시되지 않아서, 신노년층을 포함한 새 정부의 고령자일자리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파악하기 힘들다. 새 정부에서는 올해를 어르신일자리 확충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기간으로 잡고 2014년부터 관련예산을 반영한다고 밝혔으므로, 이 계획이 마련되어야 새 정부의 어르신일자리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노년층의 취업을 위한 실질적인 움직임은 서울시에서 더 앞서 시작되었다. 지난 2월 4일 서울시는 1년여의 준비과정을 거쳐 신노년층의 은퇴설계 및 준비교육과 재취업 및 창업교육을 주요기능으로 하는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개소하였다. 이와 함께 25개 자치구에 설치되어 있는 고령자취업알선센터의 장소 및 인력 재편을 포함하여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발맞춘 고령자취업지원정책의 전환을 실행에 옮겨나가고 있다. 이러한 선제적인 노력을 기반으로 중앙정부의 고령자취업정책을 견인해 나갈 것으로서, 중앙정부의 정책과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글 \_ 정은하

### ▶ 참고자료

-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집(2012.12), 「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 있는 변화」
-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2013.2),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제안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 서울특별시(2012.11), 행복한 노년, 인생이모작도시 「서울어르신종합계획」.

## 박근혜 정부의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정책과 서울시 시범사업

박근혜 정부는 140대 국정과제에서 '맞춤형 고용·복지'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을 제시하였다. 또한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확대, 사회서비스 기반강화를 통한 평생사회안전망 구축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언급하면서, 이를 위한 주요 추진계획으로 범부처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방안 마련, 사회서비스 산업화 기반 및 활성화 방안 마련, 사회서비스 재정지원 및 제공 방식 효율화, 고부가 사회서비스 전문 인력 육성 및 체계적 관리, 사회서비스 분야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제시하였다.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 창출'은 정부가 그동안 사회서비스 정책을 시행해온 주요목적 중 하나이다. 사회서비스업의 취업유발효과(27.6명)는 서비스업 평균(20.5명)은 물론 제조업 평균(12.1명)을 상회하여 자체 고용창출 효과가 크며, 특히 고용취약계층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서민생활 안정 및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반숙련·저숙련 인력의 취업이 용이하다는 점, 취업취약계층의 긴급한 취업수요에 비교적 큰 비용 없이 대응할 수 있다는 점, 다른 사업에 비해 비경제활동인구로부터의 유입이 많아 타 노동시장을 교란하는 효과가 적다는 점에서 새로운 일자리 분야로서 주목을 받아왔으며, 연간 95천여 개(서비스제공인력)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사회서비스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서비스의 질적 측면은 상대적으로 등한시 되어왔다. 박근혜 정부는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5가지 추진계획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중 고부가 사회서비스 전문 인력 육성 및 체계적 관리, 사회서비스 분야 종사자 처우개선 등은 서비스 질 제고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서울시(2012)는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고용안정성 강화를 위한 시범사업모형을 개발하였다. 시범사업은 2013년 하반기부터 실시될 예정이며, 여성장애인홈ヘル퍼 서비스(시비 100%)가 그 대상이다. 시범사업에서는 종사자들의 시간당 급여 인상(생활임금 수준)은 물론 퇴직금지급, 유급휴가, 대체인력활용, 교육수당지급 등 다양한 형태로 종사자들의 근무여건이 개선될 것이다. 또한 동일제는 물론 반일제 정규직의 개념을 도입해 종사자가 원할 경우 하루 4시간 정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모든 것은 서울시에서 위탁하는 '사회서비스품질지원센터(가칭)'에서 관리하게 될 것이며, 시범사업의 성과를 보면서 향후 다양한 사회서비스로 확대될 것이다.

사회서비스는 휴먼서비스로서 제공인력의 전문성을 통해 서비스의 질이 좌우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종사자들의 안정된 고용조건은 매우 중요하다. 양질의 고용조건은 서비스종사자들에게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적 강화에 기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박근혜 정부의 새로운 사회서비스 정책 및 그 성과를 기대해본다.

글 \_ 김미현

### ▶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내부자료(2012)
- 김미현 외(2012) 「서울시 사회서비스 종사자 고용안정성 강화 시범사업 모델 개발 연구」 서울시복지재단
-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2013.2),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제안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 박근혜 정부의 장애인주거복지정책과 서울시 노인·장애인용 지원주택 프로그램

박근혜 정부는 대선공약집에서 장애인의 공공임대주택 진입 대책을 제안하였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국정과제로써 장애인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특별분양 등 장애인대상 공공임대주택 보급 활성화와 주택개조시 기금 융자, 장애물 없는 주택설계 확대 등의 계획을 발표하였다.

서울시는 2012년 「서울시민복지기준」을 통해 지역 사회 주거에 기반한 방식으로 “노인·장애인용 지원주택 프로그램”을 실시하겠다고 하였다. 이 사업은 2014년부터 매년 150호씩 공공임대주택의 무장애화를 지원하고 탈시설을 위한 체험홈, 자립생활 가정을 매년 10개소씩 확충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복지시설 탈피시 주거공간 마련이 용이하도록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시 서울시 거주시간에 따른 배점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그리고 임대주택 8만호 사업계획(서울시 보도자료, 2013.1.17)에서 소득분위별 신청가능 임대주택 유형 중 장애인은 복지서비스 연계형인 ‘의료안심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 ‘의료안심주택’은 시립의료시설과 연계한 의료소외계층의 돌봄형 임대주택으로 서울의료원(신내) 인근 SH공사 미매각용지에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장애인 주거복지정책은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무장애화 지원 포함)과 함께 장애인 특별분양 등으로 주택을 적극적으로 보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장애인의 주거권은 단순히 주택을 공급받거나 보유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장애인 주거복지정책 계획 수립’은 장애유형별 생애주기별로 세분화하여 장애인의 욕구조사를 통해 수립되어야 한다.

장애인의 주거권 실현을 위한 계획 수립 방안은 공간적 계획과 서비스지원 계획으로 분류할 수 있다. 공간적 계획은 지원성(제한된 능력을 지원하는 보조적 지원장치), 접근성(활동을 방해 또는 위협하는 물리적 환경 제거), 안전성(안전사고의 위험이 최소화되는 환경 조성), 프라이버시(원하지 않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피할 수 있도록 개인공간과 공용공간 제공), 개인화(개인 물품을 설치, 배치할 수 있는 공간제공)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서비스지원에서는 주거와 휴먼서비스를 결합한 지원주택(supportive housing) 프로그램이 계획되어야 한다.

글 \_ 서종녀

### 참고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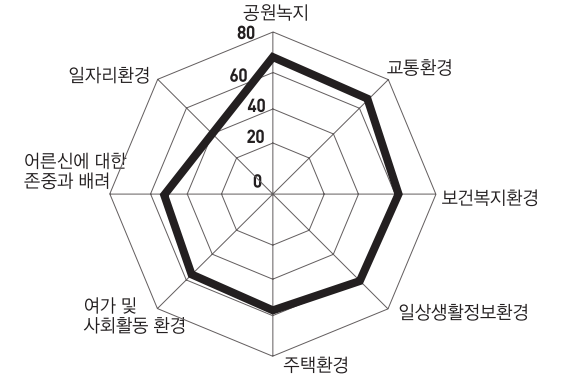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 서울시민복지기준추진위원회(2012), 「서울시민복지기준」.
-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2013.2),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제안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집(2012.12), 「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 있는 변화」
- 서울시 주택정책실 임대주택과(2013.1.17), “서울시, 임대주택 8만호 새로운 유형 쏟아진다.” [http://spp.seoul.go.kr/main/news/news\\_report.jsp?search\\_boardId=14893&act=VIEW&boardId=14893](http://spp.seoul.go.kr/main/news/news_report.jsp?search_boardId=14893&act=VIEW&boardId=14893)

## 서울시는 어르신들이 살아가시기에 얼마나 좋은 도시일까? : 서울시 거주 4천명의 베이비부머와 어르신이 진단한 서울시의 분야별 고령친화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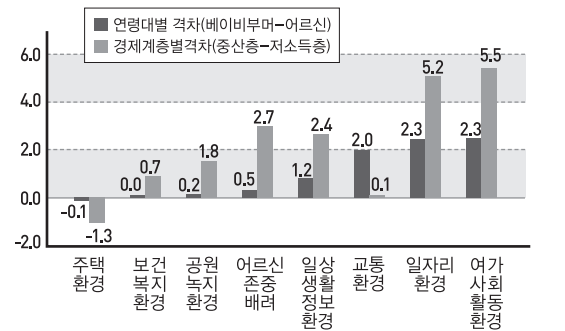
서울시는 2010년도부터 어르신을 비롯한 시민들의 안전, 건강, 사회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도시환경 구축을 목표로 하는 고령친화도시(Age-friendly City)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WHO(2007)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진단틀로써 8대 분야(물리적 환경: 공원녹지, 교통, 주택; 사회경제적 환경: 여가, 일자리, 보건복지 등)를 제시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평가점수가 높고 각 분야별 균형을 이루었을 경우, 사회·경제·문화·생활환경이 최적화되고 시너지를 발휘함으로써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고 본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4천명의 베이비부머와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일대일 면접조사를 통해 서울시의 고령친화 정책환경을 진단해 본 결과, 평균 58점(100점 환산)으로써 비교적 낮은 수준이며, 각 분야별로는 [그림 1]과 같이 불균형 상태로 나타났다. 각 분야별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일자리 환경(39점)에 대한 집중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일자리 환경의 문제점으로는 맞춤형 일자리의 양적·질적 부족, 일자리 관련 정보 접근성의 취약성, 취·창업교육 기회의 부족이 지적되었다.

[그림 2]와 같이 각 분야별 연령대별·경제계층별 격차를 분석해보면, 전반적으로 연령대별 격차에 비해 경제계층별 격차가 더 커서, 베이비부머와 어르신 간의 차이에 비해 양극화에 따른 소득계층별 격차가 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서울시 고령친화 정책환경 진단 결과(평균 58)



[그림 2] 분야별 연령대별·소득계층별 격차<sup>1)</sup>

특히 일자리 환경과 여가사회활동 환경의 경우 연령대별 격차와 소득계층별 격차가 모두 크게 나타나, 이러한 격차를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다.

글 \_ 이상철

### 출처 및 참고문헌

- 이상철(2011),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서울복지재단.
- 이상철·이웅(2012), 「서울시 노인 실태 및 욕구조사 연구」 서울복지재단.
- WHO(2007), Global Age-friendly Cities: A Guide.

1) 연령대별 격차는 각 분야별 어르신과 베이비부머와의 격차를 나타내며, 경제계층별 격차는 각 분야별 저소득층과 중산층과의 격차를 의미한다.

## 근로장려세와 저축 장려 프로그램 연계를 통한 저소득 가구 자립 지원

미국 중앙정부는 1975년에 연방근로장려세제(Federal EITC)를 도입한 이후 이를 점차 확대 시행해가고 있으며, 16개 주에서는 주 근로장려세제(State EITC)를 함께 시행하고 있다.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는 저소득근로빈곤층에 대해 근로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이를 통해 저소득 근로자 혹은 사업자에 대한 근로 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적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최근에는 근로장려세제와 개인발달계좌(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와 같은 저축 장려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저소득 가구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나아가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일리노이주에서는 복잡한 근로장려세 신청 절차를 해결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들이 근로장려세를 신청해주는 VITA(Volunteer Income Tax Assistance) 웹사이트를 운영한다. VITA 웹사이트를 통해 근로장려세를 신청할 때에는 통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신청자는 은행 계좌를 바로 개설할 수 있는데, 이는 은행 계좌를 통해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불필요한 소비를 방지하며 저축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저소득 가구

부모 혹은 조부모들이 25만 달러를 저축하면, 자녀 혹은 손자녀를 위해, 대학학자금기금(529 College Saving Fund; 서울시의 꿈나래통장과 같은 학자금 매칭 펀드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뉴욕시에서는 저축을 장려하고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세제와 연계한 \$aveNYC 프로그램을 2008년에 시작했다. 이는 근로장려세 신청 기간 중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계좌를 통해 지급 받은 근로장려금을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저소득가구에 한해 뉴욕시가 장려금의 50%가 되는 보조금(matching fund)를 지급하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 평가 결과, 75%의 참여자가 1년 동안 근로장려금을 인출하지 않았으며, 이들 중 80%는 한 해 더 근로장려금을 인출하지 않는데 동의했다. 이는 근로장려세와 자산형성의 적절한 연계를 통해 저소득가구가 저축습관을 바꾸고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성공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그 성과를 인정받아 \$aveNYC 프로그램은 2011년 그 명칭을 SaveUSA로 바꾸고 뉴저지 주의 뉴어크(Newark), 오클라호마 주의 털사(Tulsa), 텍사스 주의 샌안토니오(San Antonio) 등 세 개 시에서 확대 시행되고 있다.

글 \_ 정선경

### ▶ 기사원문

- State IDA Policy Briefs, vol.1 no.1  
<http://cfed.org/assets/documents/publications/Vol%201%20No%201%20-%20EITC.pdf>
- 일리노이주 자산형성 그룹(The Illinois Asset Building Group; IABG) 웹사이트  
<http://www.illinoisassetbuilding.org/content/6-ways-make-tax-refund-go-farther>
- Federal Reserve Bank of San Francisco 웹사이트  
<http://www.frbsf.org/publications/community/earned-income-tax-credit/linking-tax-time%20to-asset-building.html>

## 은퇴자들의 경험과 능력을 활용한 지역사회참여, 시니어코(Senior Corps)

미국정부에서는 55세 이상 장년층이 자신들의 다양한 경험을 사회적 약자들과 공유함으로써 사회 공헌 및 자기 계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시니어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시니어코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위탁조부모 프로그램(Foster Grandparents Program), 시니어 동반자 프로그램(Senior Companion Program), 은퇴자 자원봉사 프로그램(Retired and Senior Volunteer Program; RSVP)이다.

위탁조부모 프로그램에서는, 봉사자들이 돌봄이 필요한 아동·청소년들의 멘토이자 롤모델, 친구가 된다. 읽기 지도, 일대일 수업을 통해 아동의 학습 능력 향상을 지원하며 아동에게 성장 단계에 맞는 조언을 주고,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해주어 아동들이 보다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시니어 동반자 프로그램에서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성인, 노인들이 가정에서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가사 혹은 장보기 등의 가벼운 일을 돕고, 병원에 함께 가기도 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부양가족에게는 휴식할 수 있는 여유를 주고, 국가적으로는 의료비를 절감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RSVP 프로그램에 등록하게 되면 우선 어느 곳에서, 어떤 방법으로, 얼마만큼의 시간을 봉사 활동에 할애할 것인지 선택하게 된다. 그리고 건축, 예방접종, 그리기, 환경보호 등 지역 및 국가기관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재능과 전문성을 발휘하게 된다.

시니어코 회원들은 봉사 활동 전 사전 교육 과정에 참여하며, 수당도 받게 된다. 봉사자들은 주당 최대 40시간의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정부가 정한 금액 이하의 소득을 벌어들이는 이들에 한해서는 시간당 2.65달러의 급여가 지급된다. 또한 사고보험, 자동차 보험 등의 각종 보험, 교통편, 식대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되기도 한다.

1960년대 소규모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이들 세 가지 봉사 프로젝트는 1993년 클린턴 대통령 집권 당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탄생하였다. 현재 시니어코에는 500,000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으며, 회원 수는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베이비부머들의 재능과 능력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중 하나로 각광받고 있다.

글 \_ 정선경

### ▶ 기사원문

- Senior Corps 웹사이트 <http://www.seniorcorps.gov>
- Minnesota Senior Corps 웹사이트 <http://www.mnseniorcorps.org>

해외동향 \_ 영국

## 중앙정부의 보조금 삭감으로 인한 최저소득층의 지방세 인상

2013년 4월부터 잉글랜드에서는, 그간 지방세 감면 또는 면제혜택을 받아왔던 최저소득층 수백만 가구가, 100파운드(약17만원)에서 250파운드(약 42만원), 최고 연간 600파운드(약 100만원)의 지방세 인상에 직면하게 될 전망이다. 이는 영국정부가 보조금의 10%를 삭감하기로 함께 따라, 대다수의 기초지자체(council)들이 저소득 주민을 위한 지방세 보조금(council tax benefit)을 삭감하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이다.

영국의 민간연구기관인 레졸루션 재단(Resolution Foundation)이 잉글랜드의 기초지자체 326곳 중 184곳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 중 74% 가량이 저소득 가구에 지방세를 부과하거나 지방세액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국정부가 1억 파운드(약 1천7백억원)의 기초지자체를 위한 이행 보조금(transitional grant)을 제공해 왔지

만, 보수당 의원들 일각에서는 이러한 '두 번째 인두세(poll tax)'에 대해 우려를 나오고 있다. 동일 세율의 인두세는 대처정권 몰락에 큰 요인이 되었다. 현재 5천9백만 가구가 자산조사를 통한 지방세 보조금을 받고 있으며, 이 중 3천2백만 가구는 취업연령가구이다. 오는 4월 1일에 이러한 지방세 보조제도가 폐지되면, 기초지자체가 이들 계층에 대한 지원을 책임져야 한다.

한편, 웨일즈에서는 이러한 삭감은 웨일즈 정부에서 감당하고, 지자체에는 전가하지 않을 계획이며, 스코틀랜드에서는 관련 비용을 지자체와 스코틀랜드 정부가 나누어서 감당하고, 저소득주민에 대한 지원은 유지하기로 했다. 잉글랜드에서도 더럼(Durham)과 타워 햄릿츠(Tower Hamlets) 등의 40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는 지방세 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여 현재의 지원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글 \_ 김지영

### 참고자료

#### 복지개혁법 2012(Welfare Reform Act 2012)

2012년 3월 통과된 영국의 복지개혁 법안으로, 가구수당 최고액 설정, 통합수당(Universal Credit) 등을 비롯한 복지혜택과 관련된 다양한 변화를 담고 있으며, 각종 보조금 지급 책임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입안 당시부터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혜택을 축소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특히 주거기준을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보조금 제한(일명 'spare bedroom tax') 및 지방세 감면 폐지 등은 많은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dwp.gov.uk/policy/welfare-reform/legislation-and-key-documents/welfare-reform-act-2012/>  
[http://www.housing.org.uk/policy/welfare\\_reform/monitoring\\_the\\_impact/regional\\_summaries.aspx](http://www.housing.org.uk/policy/welfare_reform/monitoring_the_impact/regional_summaries.aspx)

### 기사원문

The Independent(2013.1.30)

<http://www.independent.co.uk/news/uk/politics/new-poll-tax-blow-for-uks-poorest-8473963.html>

BBC News, UK Politics(2013.1.31) <http://www.bbc.co.uk/news/business-21264773>

해외동향 \_ 영국

## 주택조합(Housing Association)의 아동빈곤 완화 노력

영국 내 빈곤아동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빈곤아동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 중의 하나인 동부 버밍엄(East Birmingham) 지역의 아쉬람 주택조합(Ashram Housing Association)에서는 전 사업영역에 걸쳐 아동빈곤 완화를 위한 연중 캠페인을 착수하고, 아동빈곤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쉬람 주택조합에서는 모든 고객접점 직원들이 아동빈곤을 인지하고, 해당되는 가정들이 적절한 복지혜택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하는 등의 적절한 개입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학식당(Holiday Kitchen)'을 비롯한 다양한 지역사회 기반 프로젝트 등도 운영할 예정이다. 방학식당은 학교 방학 동안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을 위한 학습, 놀이, 점심급식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푸드뱅크(Food Bank)에 의뢰된 아동이나 학교 무상급식(free school meals) 대상 아동에게 우선권이 있지는 않지만, 지역 내의 모든 아동들이 참여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지역사회 조직들 및 아동복지사, 부모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부모들을 위한 취업지원과 가족 간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제공할 예정이다.

글 \_ 김지영

### 참고자료

#### 주택조합(Housing Association)

영국의 주택조합은 '사회주택(social housing)'을 제공하는 비영리민간조직이다. 저소득층을 위한 저렴한 주택의 공급 및 유지보수가 주요 기능이며, 거주자들을 위한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도 제공한다. 집세와 서비스 요금에 의해 일상적인 사업을 수행하나, 대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위한 공공기금을 받으며, 정부에 의한 규제도 받는다. 현재 주택조합은 영국의 신규주택의 주요 공급자이다. 런던에도 여러 주택조합이 운영되고 있으며, 런던 내에 공급되는 신규주택에 대해서는 런던광역시(Greater London Authority)가 보조금을 지급한다. 런던 및 잉글랜드 남서부(South East) 지역에서 가장 큰 주택조합인 「가족 모자이크(Family Mosaic)」를 예로 들어보면, 23,000채의 주택에 거주하는 45,000명 이상에게 주거관리, 건강증진, 돌봄서비스, 교육, 취업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역사회 적응과 자립을 돕고 있다.

가족 모자이크의 운영 및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www.familymosaic.staging.mosaic-digital.com>

### 기사원문

the Guardian, Community Building Hub(2013. 1. 16),

<http://www.guardian.co.uk/housing-network/2013/jan/16/housing-staff-tackle-child-poverty?INTCMP=SRCH>

##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독일의 법정 최저임금제도

독일은 2012년 전까지 27개 유럽연합국 중 법정 최저임금제가 없는 7개 나라에 속했다. 임금이 저렴한 외국인노동자의 증가, 상대적으로 노동력이 싼 인접 동유럽국가로의 일자리 방출 그리고 독일 내수경기 불황 등으로 비숙련 일자리 노동자들은 임금딴평에 시달렸다. 전일제로 일하여도 각 직업군 및 고용주, 지역의 수준에 따라 시급이 천차만별이어서 인간다운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기는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계 및 정치계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오던 법정 최저임금제도가, 2012년 1월 1일부터 연방노동부(Bundesarbeitsministerium)에 의해 마침내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다. 시간당 최저임금 기준은 구동독과 구서독간의 생활물가 수준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2009년 독일 사회경제 패널조사(Sozio-oekonomisches Panel : SOEP)에 따르면 법정 최저임금제 도입 전에는

전체 근로자의 3.8%가 5Euro(7,000원 : 1EURO 1,400원 기준) 이하의 시급을 받았고 7.50Euro(10,500원) 이하 시급 근로자도 7.6%에 이르렀다. 또한 최저임금에 대한 법적근거가 부재하여 노동자들은 일자리 유지를 위해 계속되는 임금인하를 감내해야만 했다.

법정 최저임금제도는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주요한 두 가지 목적이 있다. 근로임금을 통해 국가의 추가적인 지원이나 도움 없이도 최저 수준의 사회문화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과, 노동시장의 심각한 저임금 때문에 발생하는 연방정부의 사회보장예산에 대한 부담을 줄인다는 것이다. 법정 최저임금 보장은 무엇보다 저학력 비숙련 기간제 근로자와 같이 저임금에 노출되어 있는 자들에게 근로를 통한 자활의욕을 심어주는데 의미가 크다.

독일 법정 최저임금 수준	구 분	2012.1.1~2012.10.31	2012.11.1~2013.10.31
	구 동독 지역	7.01Euro(약9,900원)	7.50Euro(약10,000원)
	구 서독 지역	7.89Euro(약11,000원)	8.19Euro(약11,400원)

글 \_ 김혜정

### 관련 국내동향

#### 서울시의 생활임금제 도입

- 「생활임금제 도입」이 작년 10월 발표된 서울시민복지기준의 소득분야 주요사업으로 포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http://welfare.seoul.go.kr/archives/2546> 참조)
- 2012년 11월 노원구와 성북구는 구 시설관리공단 노동자들(환경미화, 주차관리 등)의 2013년 임금을 서울시 근로자 평균임금의 58%로 책정하여 1,357,000원의 생활임금 지급

### 기사원문

독일연방정부 웹진 <http://www.bundesregierung.de/Content/DE/Artikel/2011/12/2011-12-20-zeitarbeit-dachdecker-mindestlohn-abinett.html>  
 지방정부 고용 관련 정보사이트 [http://www.foerderland.de/1229\\_0.html](http://www.foerderland.de/1229_0.html)  
 독일 중앙통계청 웹사이트 <http://de.statista.com/statistik/daten/studie/1376/umfrage/anzahl-der-erwerbstaetigen-mit-wohntort-in-deutschland/>  
 시사주간지 Focus 온라인판 [http://www.focus.de/politik/deutschland/arbeitsmarkt-boom-bei-teilzeitjobs-in-deutschland-besonders-stark\\_aid\\_675985.html](http://www.focus.de/politik/deutschland/arbeitsmarkt-boom-bei-teilzeitjobs-in-deutschland-besonders-stark_aid_675985.html)

## 장애아동의 위탁가정 양육법 개정 시도

독일 연방정부내각은 2013년 2월 6일, 장애아동이 시설에 입소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 위탁가정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사회보장법전 12권(사회보장청 소관)에 명시된 위탁가정 양육지원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장애아동의 위탁가정 양육 기회를 박탈하는 행정적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독일 장애아동의 위탁가정 양육에 대한 행정기관은 청소년청(Jugendamt : 사회보장법전 8권 소관)과 사회보장청(Sozialamt : 사회보장법전 12권 소관)이다. 장애아동의 위탁가정 양육은 사회보장법전 8권에 따르면 양육지원이고, 사회보장법전 12권에 의하면 사회통합지원으로 해석된다. 지역 사회보장청(Sozialamt)은 종종 장애아동의 위탁가정양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정신장애 청소년의 위탁가정에만 재정적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청소년청(Jugendamt)은 지적장애와 지체

장애 아동의 위탁가정 양육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자주 거부해 왔다. 이러한 분절적인 아동복지지원 체계 때문에 만 15세 미만 장애아동의 25~30% 정도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위탁가정에서의 양육이 어려웠다.

독일 연방정부내각의 이번 법 개정은 지체장애와 지적장애 아동에게 지역사회로의 통합(Integration)의 문을 넓힌다는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작업에는 장애아동의 위탁가정양육 지원서비스의 또 다른 관련 법규인 사회보장법전 8권(청소년청 소관)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아직도 청소년청과 사회보장청 간의 행정적 칸막이가 존재하고 있으며, 장애아동의 위탁가정 양육 지원서비스의 통합적 전달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글 \_ 김혜정

### 관련 국내동향

#### 장애아동의 가정위탁보호제 도입 정책 검토 필요

- 아동 가정위탁은 아동복지법에 근거(<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29345&efYd=20130123#0000> 참조) 하며 장애아동도 포함됨
- 시설입소가 50% 이상이며 일반가정 위탁보호는 7% 정도로 장애아동의 일반가정 위탁양육은 매우 미미한 수준임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2011년 가정위탁보호 현황보고서」 참조)
- 장애인복지법에 제시된 지역사회 중심의 거주정책을 기초로 장애아동 위탁보호도 일반 가정 중심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됨

### 기사원문

사회정책 포털 [http://www.sozial.de/index.php?id=14&tx\\_ttnews%5Btt\\_news%5D=26069&cHash=8aa1489aa83977c9075d18d56a5cf0e](http://www.sozial.de/index.php?id=14&tx_ttnews%5Btt_news%5D=26069&cHash=8aa1489aa83977c9075d18d56a5cf0e)  
 장애인특별위원회 웹사이트 [www.behindertenbeauftragter.de](http://www.behindertenbeauftragter.de)  
 Malter, Christoph(2009,2,18) '위탁장애아동-낙인과 권리 사이' <http://www.tzpsa.de/paedpsych/Fachartikel/trauma-bindung-und-vernachlaessigung/behinderung/Pflegekinder%20mit%20Behinderung.pdf>



해외동향 \_ 일본

## 생활보호비 3년 간 7.3% 인하로 최대 월2만엔 감소

일본 정부는 올해 1월 27일 생활보호비 중 매일 일상 생활비에 상당하는 「생활부조」 기준액에 대해서 2013년 도부터 3년간 670억엔(국비기준 약6.5%)을 인하할 방침이다. 더욱이 연말에 지급하는 「기말 일시부조금」(1인 14,000엔)도 70억엔 줄여, 생활부조비를 총액으로 740억엔(국비기준 약7.3%) 감액한다. 삭감은 0.2% 인하였던 2004년 이래 9년만으로 인하폭은 과거 최대 수준이다. 7월에 열리는 참의원 선거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감액은 8월부터 시행되며, 2013년도는 221억엔이 감소된다.

생활보호비는 국가가 4분의 3, 지방이 4분의 1 부담하고 있다. 생활부조기준액의 삭감폭 6.5% 중에 5.7%는 근래의 물가하락분이다. 2013년에는 「의료부조」의 삭감도 목표로 하고 있어, 저렴한 후발의약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는 것 등으로 450억엔분을 절약할 계획이다. 또 일하고 있는 수급자가 인정받는 필요 경비를 110억엔 줄여서 이를 근로의욕이 높은 사람에게 주는 새로운 보호비의 재원으로 하기로 했다.

후생노동성 계산으로는 수급세대 96%는 보호비가 감소하는데, 이 중 71%의 세대는 삭감폭이 5%이내이지만, 2%의 세대는 9~10% 감소한다. 도시지역에 거주하

는 40대 부부와 초등생, 중학생으로 구성된 4인가구의 경우에는 2015년도 이후 월 생활보호비는 20만 2,000엔으로 지금보다 2만엔 감소된다. 반면 70대 이상의 홀몸어르신의 생활보호비는 3,000엔 감소된 7만 4,000엔이며, 비도시지역에서는 큰 변화가 없다.

후생노동성에 의하면, 가구원수가 많은 세대는 생활보호비기준액이 일반저소득자의 생활비보다 현저히 높다. 이번에는 자녀양육 세대 등의 삭감폭을 늘이는 한편 단신고령자의 삭감폭을 줄여, 비도시지역의 60대는 반대로 1,000엔이 증가된다. 주민세가 비과세로 되는 소득 기준 등은 생활보호 기준액을 고려하여 정해지고 있다. 2004년도에는 생활보호비의 감액과 함께 과세대상 소득 기준도 낮아져 새롭게 과세되는 사람이 늘었다. 1월 27일 타무라 후생노동장관은 기자회견에 '생활보호와 관계 없는 사람까지 곤란하게 하는 것은 피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 후생노동성은 2월 13일 피보호자조사(월별개요: 2012년 11월) 결과보고를 통해 작년 11월 시점의 생활보호 수급자수가 214만 7,303명으로 전월보다 4,723명이 늘어나 7개월 연속으로 최다기록을 갱신했다고 발표했다.

글 \_ 이순성

### ▶ 기사원문

朝日新聞(아사히신문)디지털(2013.1.28) <http://digital.asahi.com/articles/TKY201301270441.html>  
 毎日新聞(마이니치신문) 도쿄조간(2013.1.28)  
<http://mainichi.jp/select/news/20130128ddm001010060000c.html>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http://www.mhlw.go.jp/toukei/saikin/hw/hihogosya/m2012/11.html>

해외동향 \_ 일본

## 도쿄지방검찰청, 고령자·장애자 재범방지 위해 복지전문가 채용

도쿄지방검찰청은 2013년 1월 21일자로 고령자와 지적장애인의 범죄재발 방지를 위해 사회복지사 1명을 비상근직원으로 채용했다고 발표했다. 고령자와 지적장애인 중에는 주거와 직업이 없거나, 장애의 특성에 적합한 지원을 받지 못하여 상점에서 물건을 훔치거나 무전취식 등의 범죄를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도울 수 있는 복지지원 체제를 만들기 위해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전문가를 채용하기로 한 것이다. 지금까지도 일부 검사들은 자체적으로 용의자를 복지시설로 연계해 왔는데, 이번에 조직적인 체제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도쿄지검 내부에서는 관련 검사들로 구성된 '사회복귀 지원 검토 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채용된 사회복지 전문가는 위원회 내부의 준비실에서 용의자를 복지시설에 연계하는 등의 실무를 맡게 된다.

2012년 범죄백서에 의하면 2011년에 형무소에 입소한 65세 이상의 수형자 중 약 70%가 재입소하는 등의 현상이 발생하여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기소와 구형 등을 판단하는데 복지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는 조치는 나가사키지방검찰청 등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었지만 사회복지 전문가를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은 도쿄지방검찰청이 전국에서 처음이다. 이번 시도가 성과를 보이게 되면, 다른 지방검찰청을 위해서도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글 \_ 이순성

### 관련 국내동향

#### 고령범죄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재범률은 낮으나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임

- 65세 이상의 고령범죄자 재범률은 2011년 41.5%(전체 46.9%)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나, 61세 이상의 범죄자수는 2006년 101,199명에서 2011년 124,834명으로 5년간 23.4% 증가되어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전체 범죄자수는 5년간 8.9% 감소)

자료 : 경찰청범죄통계 <http://www.police.go.kr/>

### ▶ 기사원문

朝日新聞(아사히신문)디지털(2013.1.23)  
<http://www.asahi.com/national/update/0120/TKY201301200104.html>  
 日本經濟新聞(니혼케이자이신문) 전자판(2013.1.22)  
[http://www.nikkei.com/article/DGXNASDG2103W\\_R20C13A1CR8000/](http://www.nikkei.com/article/DGXNASDG2103W_R20C13A1CR8000/)

## MdM Greece의 복지서비스와 결합된 의료지원 프로그램

그리스 내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널리 알려진 비정부 기구인 MdM Greece(Médecins du Monde, Doctors of the world)는 복지서비스와 결합된 의료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경제위기 이후 심화되고 있는 빈곤층의 고통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 MdM Greece에서 운영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한 폴리클리닉(Policlinic) 운영, 노숙인 지원 프로그램, 빈곤노인 지원 프로그램(Message of Life) 등이 있다.

폴리클리닉에서는 일과시간 중에 이루어지는 일차 진료(Primary Health Care), 응급환자를 각 병원의 자원봉사자 네트워크의 도움을 받아 병원과 연계시키는 응급진료(Emergency Cases), 약품을 공급하는 약국(Drugstore) 등 세 가지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1997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아테네 지역의 폴리클리닉에서는 지금까지 100,000명 이상의 환자들이 진료를 받았으며, 매년 평균 14,000명의 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있다.

노숙인 지원 프로그램은 이동진료소(mobile unit)와 개인적 접촉에 의한 심리사회적 지원인 도보캠페인(campaigns on foot), 두 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이동진료소는 5명의 팀에 의해 운영되며, 매주 두 차례 아테네 시내를 돌면서 노숙인들에게 의료서비스와 생필품 및 노숙인 지원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도보캠페

인은 매주 세 차례 심리학자와 심리치료사로 구성된 팀이 노숙인들을 직접 찾아가 개별상담을 제공함으로써, 타인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자립을 위한 시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정이다. 예전에는 정신질환이나 약물중독 등이 노숙의 주요 원인이었으나, 경제위기 이후에는 이러한 일반적인 범주에 속하지 않는 '신세대 노숙인' 들도 증가하여, 아테네에서만 11,000명이 노숙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생명의 메시지(Message of Life)는 빈곤노인들을 위한 건강 및 영양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폴리클리닉에서의 진료와 예방접종, 방문진료, 식료품 지원 등으로 이루어진다. 경제위기로 인해 연금생활자들과 노인들이 더 큰 타격을 입으면서 기본적인 의료서비스와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는 빈곤노인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는 상황을 타개하고자, TIMA 재단(TIMA Charitable Foundation)의 지원을 받아 2012년 9월에 시작되었다.

MdM의 프로그램들은 당초에는 난민이나 이민자들이 주 대상이었으나, 경제위기 이후 의료보장 상태가 악화되고, 정신질환이나 약물중독 같은 전통적인 노숙인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신세대 노숙인' 들이 증가하면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을 받는 그리스인들의 숫자도 늘어나고 있다.

글 \_ 김지영

### ▶ 기사원문

- MdM Greece 웹사이트, <http://www.mdmgreece.gr/en>
- MdM International 웹사이트, <http://www.doctorsoftheworld.org/>
- The Guardian (2013. 2. 11)  
<http://www.guardian.co.uk/commentisfree/2013/feb/11/greece-humanitarian-crisis-eu>

### 복지이슈 Today는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국내외 복지동향을 소개하기 위해 2013년 4월에 창간된 월간지입니다. 발간에 관련된 문의사항과 개선을 위한 의견이 있으시면 발간팀(경영지원부 교류협력팀, 02-2011-0570, jykim@welfare.seoul.kr)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복지재단**  
Seoul Welfare Foundation

[www.welfare.seoul.kr](http://www.welfare.seoul.kr)  
110-062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52  
Tel. 02)2011-0570 Fax. 02)2011-0520